

“기후부 출범, 녹색문명 전환 초석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적극육성”

김성한 장관, 풍력업계 간담회

“해상풍력, 국가 성장동력 육성
육상풍력 전담 TF 조속히 출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스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SK이노베이션 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 크레도, GS원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과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후부

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금융투자 지원 한계 등 풍력발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전력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HRD 컨퍼런스인 Unleash HRD World에서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엘리엇 토마스 Unleash CRO, 윤여일 한국전력 인사처장, 모 코기 Unleash 영업총괄. /한전

한전, 유럽 HRD ‘언리시 어워드’ 수상

인재개발 체계·육성 모델 인정받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최고 권위의 ‘2025 Unleash HRD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 주관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유럽 양대 HRD 종합대상을 같은 해 동시 석권한 쾌거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HRD 컨퍼런스 ‘Unleash HRD World’에서 한전은 조직의 전략적 인재개발 체계와 포용적 인재 육성 모델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Unleash HR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영국 소재)가 공동 주관하며 ▲조직 내 인재개발의 전략적 활용 ▲HRD 기능의 영향력 ▲성과 연

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비전 실현을 위한 HRD 혁신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사·교육·평가 전반에 반영한 새로운 인재상 ‘P.O.W.E.R.(Passionate·Open-minded·Wise-thinking·Ethical·Responsible)’을 중심으로, HRD를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성과창출 전략 파트너로 전환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 고졸 인재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체계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개설, 고졸 직원의 경력·학습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직무별 역량사전을 기반으로 한 성장 로드맵 체계화, 근무 중 학습을 보장하는 ‘축적의 시간’ 제도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상향

‘예약기반음식점’ 별도로 구분

예약보증금·위약금 사전 고지해야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타디카페·예약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약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약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폐기 등 음식점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약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빈집 정비 모태펀드 민간투자 본격화

농식품부, 민자유치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반영됐다.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농업-기업 우수협력 5건 추가선정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채널에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5건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외식 신제품 개발과 청년농 생산 지원(롯데지알에스) ▲전국 원료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확대 및 소스류 납품(비에이치앤바이오) ▲지역 포도 생산자와 공동 품질관리 및 고품질 전통주 생산(농업회사법인 화성양조장) ▲잉여농산물 구매 및 지역 홍보 연계 가공식품 개발(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 ▲계약농가 생산물량 전량구매 및 과제음료

개발(농업회사법인 일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우수사례 선정 이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추가 발굴을 위해 9월 15일부터 진행됐다. aT는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잉여농산물 활용, 계약재배 확대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5건의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aT는 이번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홍보영상, 우수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에 확산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상생협력 로고 디자인 부여, 대외 포상 추천, 식품의식종합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공급망 구축’ 논의

KIAT, 24일까지 관련행사 열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2일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교류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KIAT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6개 기관이 주관했다.

행사는 기술개발 이후 양산·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과 직접 만나 협력 방

안을 논의하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IAT의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끝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실제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5년간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634개 기업의 양산성능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7153억 원 규모의 사업과 매출을 달성했다.

/세종=한용수 기자